

미디어법 현재 판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일 시 : 2009년 11월 3일(화) 07:30~09:00
장 소 : 국회 당대표실 (본청205호)
주 최 : (재)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제22차 민주정책포럼

□ 주 제

- 미디어법 현재 판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09년 11월 3일(화) 07:30~09:00
- 장 소: 국회 당대표실(본청 205호)

□ 초청연사

- 박 재 승(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주최

- (재)민주정책연구원

사회 : 정봉주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시 간	내 용
07:30 ~ 07:45	개 회 ※ 식사
07:45 ~ 07:50	인사말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07:50 ~ 07:55	축 사 : 정세균 (민주당 대표)
07:55 ~ 08:25	강 연 : 박재승 (변호사, 전 대한변협 회장)
08:25 ~ 08:55	질의 및 답변
08:55 ~ 09:00	폐 회



목 차

존재 이유 스스로 말살시킨 헌법재판소	5
미디어법 관련 오마이뉴스 인터뷰	9
최종변론 요지서	19

존재 이유 스스로 말할시킨 헌법재판소

박재승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대한민국 헌법과 10월은 해괴한 인연이 있다. 박정희에 의하여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론으로 유린된 것이 1972. 10.이고 그의 가까운 친구 김재규에 의하여 간신히 회복된 것이 1979. 10.이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의하여 유린당한 헌법을 공식화시켜 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2009. 10. 29.이다.

그 결정 요지는 날치기된 신문법, 방송법 등 4개의 법안에 대한 가결선평행위가 위헌이기는 하지만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위헌 상태의 시정은 그 위헌을 야기시킨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생각 많이 해서 절묘하게 쓰여진 문장이 새롭기도 하다. 그 동안 자율권 행사를 못해서 위헌사태를 저질렀으니 이제 자율권을 존중해 줄 테니 시정해 보라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그런데, 무언가 선뜻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 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에게 절도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장물의 처분을 알아서 하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은가.

같은 헌법재판관인 송두환, 조대현은 이에 대하여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사명인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면서 그 시정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그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헌법 공부를 특별히 많이 했다는 축에 끼지 못하는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같은 법률가, 그것도 헌법재판관 상호 간에도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관하여 이렇게 이견이 생기는 것이 또한 해괴한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사명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의 사명인 것이 분명한데, 그들 사이에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무슨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생각해 보니 다른 말이 있을 수도 없겠다. 여기서 더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들이 위헌사태의 시정을 맡겨 놓은 피청구인이 이를 시정해 줄 것으로 믿고 이견 결정을 한 것인지, 그 시정을 안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한 것인지 알고 싶은 것이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시정이 안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낸다. 주권자가 낸 세금으로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 법관도 그 세금으로 맡은 일을 한다. 법관은,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관은 다른 법관과도 또 달리 자기가 하는 재판이 나라의 앞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야 한다. 감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이견 미디어법이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헌법적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날치기를 하였을까? 궁금하다. 일자리 창출과 방송다양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위헌사태라는 희생을 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적어도 그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다수이면서 왜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숨겨놓은 다른 가치가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을 숨기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들은 다수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주의와 다수의 지배는 동의어가 아니다. 의회에서 의 다수라는 이유로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기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차 주장한 바이지만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소수자에게도 다수자와 대등한 권리를 갖도록

대우해 주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소수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이 이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품위 있는 사회, 품위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돈이 많다고 품위가 생기는가.

한나라당에게 헌법재판소가 제트엔진에 비견할 만한 날개까지 달아주었다. 한나라당은 축배를 들 만하다. 그러나 이견 결정문을 여기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결정문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헌이지만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권한침해로 야기된 위헌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긴다고 되어 있다. 분석을 하면, 피청구인은 헌법을 위반한 권한침해를 했다, 피청구인이 야기한 위헌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 자신에게 맡긴다, 그 이유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필자의 식견으로는 현재의 이 결정은 가해자인 피청구인더러 본인이 저지른 위헌상태를 시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점잖게 한 것으로 본다. 국회의장이니까 소속의원들에게 끼친 상처는 스스로 시정해 주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다. “시정”이라고 하였지 “시정 여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지 않은가. 피청구인은 이 권고에 따라 줘야 한다. 그래야 헌법재판소 체면도 회복되고 피청구인의 체면도 살아날 것이다. 나라도 조용해질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

만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헌사태를 스스로 시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이견 현재의 결정은 엄청난 불행의 불씨를 공인시켜준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앞으로 헌법개정을 비롯한 수많은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대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견 현재결정을 근거로 이견과 유사한 날치기를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강행할 것이다. 그때는 아무리 저항해 보아야 호소할 길이 없다. 저항하는 자만 경찰에 끌려 나가고 검찰에 불러 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야당은 할 일이 없게 된다.

당장 헌법개정안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의 유신헌법이 나온다 한들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이번 날치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위헌적인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것은 이제 국회의장이 시정하러 들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참 묘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다시 달라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이 남의 대리투표를 해도,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되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재투표 하여도 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송두환,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대로 이견 법안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지 아니하면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을 염려해서 소수의견을 낸 것이다. 어떤 의견이 옳은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무 낙담하지는 말자. 국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야 한다. 역사는 발전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바로 뒹굴고 있는 낙엽을 보라.

끝으로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다산이 200년 전에 그 아들에게 하였던 말 하나를 소개한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 것이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실천하라. 그러면 크게는 하늘을 섬길 수 있고 작게는 한 가정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온 세상의 재화(災禍), 우환(憂患), 하늘을 흔들고 땅을 움직이는 일이나 한 집안을 뒤엎는 죄악은 모두 비밀로 하는 데서 생기게 마련이니 무슨 일이든 그 결과를 깊이 살피도록 하여라.”

미디어법 관련 오마이뉴스 인터뷰

박재승(70) 변호사가 뿔났다. 언론법 권한쟁의 사건의 청구인측 변호인을 맡은 박 변호사는 두 번 진행된 공개변론 때마다 걱정을 쏟아냈다. 소소하게 내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잘잘못을 따질 게제가 아니라고 호통 쳤다. 국회가 국회법도 안 지키면서 상대방 탓만 하느냐고 나무랐다. 누구더러 지금 법을 지키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200년 전 다산의 목민심서도 인용했다. 토마스 프리드만의 칼럼도 참고했다. 사법부의 권력 눈치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라며 제발 굴종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라고 당부했다. 칠순 원로변호사의 걱정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벗어나서도 지속됐다.

박 변호사는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사건의 선고를 코앞에 두고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디어법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나올 때 인터뷰를 요청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헌법재판소에게 자신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호소하고 싶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압구정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박 변호사는 간청하듯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치국가의 체면을 세워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 한 원로변호사의 법률가적 양심

그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하기만 하면 이 사건 법안들은 전부 무효가 돼야 한다”며 “아무리 봐도 내 상식과 양심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사법부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판사들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박 변호사는 “언론법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이라며 “한나라당이 이 법을 밀어붙인 것은 장기집권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차라리 한나라당은 장기집권하면 안되느냐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 정당성을 설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조중동 방송 출현과 관련해 그는 “언론, 자본, 권력이 공생관계에 있다”면서 “일본 자민당이 해온 것처럼 방송을 장악, 대국민 세뇌작업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날치기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재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0.28 재보선 선거 하루 뒤인 29일께 언론법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박재승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날치기를 위한 사전 모의와 공모가 없었을까

- 언론법 권한쟁의 선고를 앞두고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이 있는가.

“헌법재판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번 사건은 중대 사건이다. 국회법을 깹그리 무시한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법하다고 결정하면 그것은 국가적 재앙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으로 법치국가의 체면을 유지할 것인가. 역사 앞에 부끄러워 어떻게 할 것인가.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이 꼭 한번은 생각해봐야 할 점들이 있다.”

-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한나라당은 언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법을 단 한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난 7월 20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단상을 점거하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지 하루가 조금 지나 이유 없이 그것을 스스로 깨버렸다. 한나라당이 단상을 점거한 직후 의장이 직권상정 해버린 것이다. 국회법 제 85조 제 2항의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날치기에 썬먹을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의장의 위 공언은 민주당을 따돌리기 위한 방책이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의 약속은 날치기를 위한 것이었다. 날치기를 위한 게 아니었다면, 김 의장은 단상을 점거한 한나라당에 불이익을 줘야 옳다. 그런데 무슨 불이익을 주었나. 불이익은 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일단 단상점거는 풀게 했어야 했다. 의원들을 진정시키고 경호권을 발동해서 질서유지를 한 뒤 투표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국회법상의 절차를 깡그리 짓밟아 버렸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

김형오 의장은 약속 안 지킨 게 껄끄러우니까 이윤성 부의장을 시켜서 일을 처리했다. 국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만 부의장이 대행토록 되어있다. 그런데 김 의장은 멀쩡하게 있으면서도 부의장에게 대리토록 했다. 날치기를 위한 모의와 작전 없이 가능한 일이겠나.

날치기는 야바위꾼이나 하는 짓이다. 야바위꾼들의 놀음은 본래 공모 없이 불가능하다. 속임수를 쓰려고 작정해야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전모의가 분명 있었을 거라는 얘기다. 단상점거, 대리투표, 망보는 조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단상을 점거하면 민주당이 저항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단상을 사수해야 의장이 마이크잡고 시나리오에 따른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단상점거조의 자리에 가서 대리투표를 해줄 대리투표조가 있어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야당의 동향을 살펴 회의장에 알리는 망보는 조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동영상을 분석해보면 한나라당의 단상점거 후 민주당이 본회의장 쪽으로 접근하자 망보는 조가 ‘민주당 들어옵니다.’라고 회의장에 알리는 소리가 있는 후 민주당의 저항이 거세졌고 그 직후 거의 동시

다발로 대리투표가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래 날치기는 사전모의 없이 는 불가능한 것이다.”

-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반론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럴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헌법재판관들의 태도다. 모 재판관은 지난 2차 공개변론 때 청구인측에 이런 질문을 했다.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봐가면서 투쟁을 하든지, 방해로 하든지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나는 너무 당혹스러웠다.

국회에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문인식시스템이 없다. 전에는 기립투표를 하거나 명패를 갖고 가서 신분확인을 한 뒤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집어넣고 찬반을 쓰는 투표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누구나 아무 자리에서도 모니터를 터치만 하면 찬반투표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시스템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자율(자기절제 “self-restraint”)을 하 아니하면 안되게 되어있는 것이다.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조금만 있었다면 아무리 급해도 경호권을 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어도 제 자리에 착석하게 한 후 표결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야 자율인 것이다. 그런데 부의장은 대리투표, 재투표 등을 항의하는 연호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를 읽어내려 가기만 했다. 이것을 두고 그들은 자율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적법한 절차였다고 결정한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날치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떻게든 처리해버려야 한다는 공모가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이 청구인 측에게 국회의장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는데, 솔직히 '이 사건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묻고 싶을 정도였다.

피청구인들은 그들의 날치기에 대한 민주당의 저항을 두고 심의 표결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날치기를 모의하였다. 한나라당이 먼저 표결

권 침해를 모의하고 들어온 마당에 민주당이 심의표결권을 포기한 게 아니냐고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염치없는 주장이다.”

◆ 민주당이 투표방해를 한 까닭을 알아야 한다

- 한나라당은 국회자율권을 강조한다. 입법부 일에 왜 사법부가 간섭하느냐는 것이다.

“자율에 대해 백과사전까지 찾아봤다. 남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몸조심하는 것이 자율이다. 국회의 자율은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규정은 거의 전부가 국회의 자율, 자존을 위한 규정이다. 특히 제143조 질서유지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자율과 자존을 위해서 국회에서 지켜야 할 것을 스스로 깬다. 그래 놓고 자율권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고 위반하면서 자율권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라? 말이 안 된다.”

- 한나라당 측이 공개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방해 행위가 나온다.

”투표방해만 문제 삼을 수 있는 건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을 정부여당이 날치기 하려고 해서 야당인 민주당이 막은 거다.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투표방해 했다. 그런데 왜 투표방해를 했는가 그걸 따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잘못된 것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럴 수 있나.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을 날치기해놓고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는가.

공무집행방해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야 방해죄가 성립되는 거다. 공무집행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면 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 뺨 때리고도 무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름만 공무집행이지 그에 위법성이 있다면 이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히 무죄다. 이런 원리를 망각하고 질문하니,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질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최근 헌법재판소 분위기를 전해들은 바 있다.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얘기가 들린다. 그걸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제대로 판결하면 전부 무효가 돼야 한다. 아무리 봐도 내 법률상식과 양심으로는 그렇다.

지금 사법부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장치다. 법치국가에서 사법은 권력의 오만과 잘못에 제동을 거는 것을 그 본분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판사들이 자신의 임무를 흔히 방기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헌법재판소는 87년 헌법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유가 있다. 큰 결단을 내리라는 거다. 과거에 잘못됐던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으라는 게다. 날치기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국가의 체면과 위상을 누가 세워줄 수 있겠나. 누군가는 잘못된 행동에 엄단을 내려야 할 것 아닌가.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다. 잘못된 행동도 봐주는 행태, 이게 온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

◆ “헌법재판소가 권력 눈치 봐서야 되겠나”

- 헌법재판관들이 권력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야간 집회 위헌 문제가 불거진 게 작년 6월이다.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들끓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때다. 그런데 이번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내년 6월까지 위 집시법이 유효하다고 했다. 이른 봄, 중대사건이라면서 공개변론까지 해놓고 이 해가 다 갈 무렵에야 결정했다. 그것도 모자라 내년 6월까지 이 법은 유지되는 걸로 해놓았다. 국민의 기본권은 도대체 안중에도 없는 결정이다.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 당장 무효가 되면 국가가 무너지는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국가인가. 그들은 허약한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염려 말고 양심에 따라 결정해달라. 물론 기각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정이다. 그러나 재판은 늘 신선해야 한다.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미루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정권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

- 이 법의 무효화가 왜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

“언론법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이다. 한나라당은 여론다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로 이 법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끝이곧대로 믿는 이는 없다. 뭔가 수상하다. 그대로 믿기 어렵다. 최근 일어난 손석희, 김제동 등의 사례를 보자. 미디어 개수가 늘어난다고 방송의 다양성, 여론의 다양성이 생겨 나겠는가. 이점 하나만 보아도 한나라당이 이 법을 밀어붙인 것은 그 속셈이 다른 데 있다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속내를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 다수의 지지를 받아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다. 다수이면서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가.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다른 가치를 내세우고 설득해야 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하나.

”모른다. 다만 제대로 하면 전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우려스러운 바는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문제, 미네르바 사건도 적기에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감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저 서랍 속에 갇혀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의 체통을 지켜줘야 한다.

정부는 우리가 G20 의장국이 됐으니 국가 위상이 올라간다고 한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국가 위상이 올라갈 수 있겠나. 국가는 본디 약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200년 전에,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그렇게 주장했다. 200년 뒤의 세대인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다산에 의하면 양처럼 순한 백성들을 승냥이와 호랑이 같은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이거늘, 참으로 한심스럽다.”

- 일각에서는 조중동에 종합편성채널을 주려는 의도가 크다는 지적도 한다.

“언론, 자본, 권력이 공생관계에 있다. 일본 패튼을 그대로 따르려는 것이다. 자민당의 56년 장기집권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방송이다. 결과적으로 대국민 세뇌작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회법을 한 조문도 지키지 않은 이 건 날치기 미디어법을 적법하다고 한다면 본의든 아니든 간에 이에 동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할 것이다. 두고 보라. 우리의 사범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 “민사소송 과실상계 하듯 재판하지 말기를”

- 언론법 권한쟁의에서 현재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때 몹시 우려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5년 단임제를 고친다고 했는데 필경 이에 그치지 는 않을 것이다.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나의 상상력의 범위는 이렇다. 헌법 전문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저항권 관련 부분 등,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 119조 제 2 항 정도를 손 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중요시 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범죄 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이 사건 언론법들은 권력과 자본이 결합한 기업의 지배,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경제력의 남용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 119조 제 2 항이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면 “선례”를 내세워 또 날치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한다.”

- 소위 '조중동 방송'이 탄생하면 무슨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보나.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만의 잔치가 될 거다. 용산 참사를 보라. 그래 놓고 친 서민 운운할 수 있는 건가. 정운찬 총리는 유가족 위로가 필요하다면서 찾아가놓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중앙정부가 개입하기 힘들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왜 간 건가. 놀러 갔나. 중앙정부가 개입하기 힘든 사건인데 왜 특공대까지 투입해서 그 사고를 쳤나. 결과적으로는 사고 났으니 이때부터는 개입 안한다는 발뻘하는 소리밖에 안 된다. 그게 친 서민인가. 정권이 밀어붙이기 하면 이런 사고는 계속 터지게 돼 있다.”

- 언론법 통과가 적법했다고 결정이 나오면 향후 이 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

“헌법재판소는 제발 이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해 달라. 악법이라는 점을 깨우쳐 달라. 국회에서 이 같은 일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를 바란다. 날치기와 대리투표, 재투표를 허용하면 그들은 또 이것을 선례라고 써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절망한다. 그 점을 예상하고 막아 달라. 언론법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한나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이 그렇게 급할까. 사람이

하는 일이 상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숨기는 속셈이 있는 법이다. 그들은 선례를 법률보다 우선시하고 이른바 「자율」을 법률보다 우선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이 원하는 선례를 만들어 주면 위험하다.”

- 사심이란?

“돈 받는 것만 사심이 아니다. 판사가 자기 편안함을 위해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도 사심이다. 또 출세를 위해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사심이다. 민사소송 하듯이 이쪽도 좀 봐주고 저쪽도 좀 봐주는 방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건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 아니다.

권력의 눈치 혹은 친분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조금씩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하지 말기를 바란다. 과실상계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 떡 나눠주듯 여기도 한 개 저기도 한 개 주는 식으로 하지 말라. 몹시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다.”

끝으로 이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다산이 그 아들에게 하였던 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 것이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실천하라. 그러면 크게는 하늘을 섬길 수 있고 작게는 한 가정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온 세상의 재화(災禍), 우환(憂患), 하늘을 흔들고 땅을 움직이는 일이나 한 집안을 뒤엎는 죄악은 모두 비밀로 하는 데서 생기게 마련이니 무슨 일이든 그 결과를 깊이 살피도록 하여라.”

최종변론 요지서

사 건 2009헌라 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정세균 외 91

피청구인 국회의장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공개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 국가의 품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대리인은 이 사건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포함한 전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입법권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송구조상 겉으로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공방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저는 우리국민 모두가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9. 10. 모두변론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측에서 이 사건 국회의 혼돈상황이 마치 청구인 측의 방해에서만 비롯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부분을 조금은 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변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 이 사건 미디어법을 두고 대치해오던 여야는 2009. 7. 15. 여야가 동시에 각 20~30여 명씩 본 회의장을 점거하였습니다. 그 후 7. 17. 각 3 명씩만 본회의장에 배치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고, 국회의장은 같은 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단상을 점거하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고 공언한 것입니다. 민주

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장의 이 약속을 믿고 의원들을 설득시켜 단상 점거라는 수단을 쓰지 않고 여당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날인 7. 21. 20:00 경 민주당 간사 전병현, 최문순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고흥길, 나경원 간사등과 협상을 벌여 기존의 입장보다 훨씬 진전된 내용의 제안을 하였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22일 오전에 있을 당중진연석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수정제안을 논의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7. 22. 08:30 경 김형오 의장에게 전날 있었던 위 협상내용을 설명하고 22일 중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 주길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같은 날 09:10 을 조금 넘어 전격적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하였고, 국회의장은 같은 날 10:30 경 직권상정을 전격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실입니다.

의장의 위 직권상정은 위법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날 밤까지 양당이 협상을 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로부터 협상을 잘 중재해달라는 부탁까지 받았던 의장으로서의 의당 그의 공언대로 단상을 점거한 한나라당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에게 단상점거를 풀도록 하는 조치는 취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도리이지요. 그럼에도 그는 오히려 거꾸로 그 단상에 직권상정을 한 것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한나라당과 모의하여 이견 날치기를 획책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단상점거 세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의 약속은 민주당을 따돌리기 위한 방책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 제 85조 제 2항이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가리켜 이른바 직권상정이라고 하나, 그것이 이렇게 위법 부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아가 의장이 부의장에게 이 사건 의장직무를 대리케 한 것도 위법입니다. 국회법 제 12 조 제 1 항은 국회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만 대리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위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날치기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이견 법안들을 한나라당이 의회에서의 다수를 내세워 밀어붙이려 한 것에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워낙 열세인 민주당으로서는 단상을 기습점거한 한나라당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초유의 혼돈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윤성 부의장은 무권투표, 재투표를 항의하는 연호에 개의치 않고 미리 짜온 시나리오를 읽어 내려가기에만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영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이 1948년입니다. 60년이 지났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혹자는 다수결 원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라 하더라도 소수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때 소수를 단순히 용인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소수자에게도 다수와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대우하지 아니하면 민주주의는 정착할 수가 없다”는 것에 이론이 없습니다. (별첨 Friedman: Democracy's root: Diversity, New York Times). 국민이 다수로 만들어진 것은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이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수를 설득하라고 만들어 준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3. 이 사건 국회는 법안상정부터 표결에 이르기까지 국회법을 통째로 무시한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의결절차에서의 정의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도 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총체적 혼돈입니다. 대리투표, 재투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혼돈은 네 개의 법안처리 과정 전부를 관통해버린 것입니다. 상식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혼돈 상황에서 어떤 법은 적법하고 어떤 것은 위법 하다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 북의 댐 방류로 만들어진 물바다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 인간이 만들어낸 쓰나미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옳습니다. 반이성적이니까요. 우리의 이 사건 국회를 뒤흔든 대 혼돈은 대의민주주의를 삼켜버린 쓰나미였습니다. 이것을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합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법은 상식을 체계화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해석과 적용도 상식에 부합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 혼돈을 두고 “자율권이다.” “의사정리권이다.” “선례다.” 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대리투표까지 선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율이란 문자 그대로 자기 규율을 의미합니다. 사전을 보면 자신의 욕망이나 남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도덕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칸트 윤리학의 중심 개념이라고 합니다. 서양사람들은 이를 self-restraint 라고 합니다. 그 뜻을 보니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상 맞기 때문에」 (the ability not to do or say something you very much want to, because you know this is more sensibl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극히 이성적인 처신을

자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율을 내세우는 분들의 처신은 자율이 아니라, 이른바 다수당의 오만 때문에 자제력을 상실한 것이었지요. 오만과 자기도취는 낭패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율이라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뜻일진대, 부의장 말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는 의당 국회법 제 10조, 제 145 조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우리는 자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최소한 본인의 자리에 돌아가 착석 후 재석버튼부터 눌러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후에 표결 선포를 하였어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본인인증장치(지문인식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누구라도 어느 자리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투표를 되는 현행 전자투표 시스템 하에서는 본인착석 확인을 위한 질서유지권 발동 없이는 투표를 무의미해지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의장이 표결독촉, 재투표 독촉만을 일삼았습니다. 현행 전자투표제의 허점을 이용한 몰아붙이기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법에도 없는 “표결불성립”이라는 용어를 꺼내 재투표를 시키는 것이 자율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의사정리권일 수도 없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처사입니다. 피청구인들은 야당의 방해로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그런 주장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 사건 혼돈국회는 국회의장의 식언으로 촉발된 것입니다.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측에는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깬기 때문에 일어난 혼돈입니다.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 건 법안이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이었다면 야당이 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당의 이 건 반대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를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이른바 다수당의 횡포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당의 책무인 것이지요. 법리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국회의장의 직무집행 방법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백 보를 양보하여 야당의 방어행위가 부당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국회의 의사절차가 적법한 것이 된다는 이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4. 이 사건은 큰 틀에서 보아야 합니다. 소송구조상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공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사건의 본질은 어느 한 쪽의 승패를 가리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 사건 재판은 과실상계를 하는 재판도 아닙니다. 국회의 입법권 행사의 위법성에 관한 재판입니다. 청구인, 피청구인 중 어느 측의 잘못이 더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의사 절차상의 정의에 합당한

것이나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난장판 국회에 철퇴를 가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국회의 혼돈은 가히 무기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도 물론 누가 그것을 유발시켰느냐, 방어가 심하지 않았느냐 라는 식의 책임공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경중과는 별도로 전쟁은 반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것을 막느냐 방치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책임공방의 관점으로만 이 사건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런 관점은 자칫 이 사건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 자기파괴인 것입니다. 국회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임은 물론입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대리투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당연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그 한 표의 무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법 등에 따른 투표에서 무효 투표수를 가려내어 그것이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따지는 식의 논리, 덧셈, 뺄셈을 하는 방식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입법절차에서의 표결은 입법권 행사의 구성요소 이지 경쟁자를 가리는 표가 아닙니다. 국가의 입법권 행사가 범죄행위로 이루어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권행사에서의 대리투표는 한 건이라도 용납될 수 없고, 전부의 무효를 가져옵니다. 법률은 우리의 몸으로 치면 신경이나 혈액과 같은 것입니다. 신경을 관장하는 신경계, 그리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혈관에 독극물 한 톨이 들어간다면 한 방울은 괜찮고 몇 방울은 안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그 한 방울을 꺼내면 되는 건가요? 꺼낼 수 있는 건가요? 그것들은 이미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한 방울도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입법권행사에 위법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법은 우리의 이상,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흠이 없어야 국민에게 그 준수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입법절차에서의 정의는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줘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깨우침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대리투표는 1인1표제를 뒤흔들어버리는 처사입니다. 대리투표자가 던진 표들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리투표 두 표를 포함, 전부 3표를 던졌다면 그 3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이미 국회인으로서의 행위가 못됩니다. 모두 위법한 것입니다. 그 빗나간 정신을 쫓낼 수 없는 이치입니다. 나아가 판례를 보면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상벌위원회의 구성에 자격이 없는 자가 끼어있는 경우 그 위원회의 징계권의 행사는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종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 53716판결). 이 사건은 징계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국가의 입법권 행사의 위법이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 그리고 위법 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도 인권이라는 큰 가치를 위한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 긴 안목을 가지고 나쁜 과거를 끊는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신문법 처리시의 영상을 보면, 이화수 의원이 조해진 의원석 모니터를 터치한 사실, 이화수 의원이 김태원 의원석 모니터를 터치한 사실, 여상규 의원이 이범래 의원석 모니터를 터치한 사실, 박종근 의원이 김소남 의원석 모니터를 터치한 사실은 같은 영상상 분명히 확인되고, 이사철 의원은 로그 기록상 같은 의원석 모니터가 터치된 시각을 전후하여 계속 단상에만 있었던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누군가가 대신 터치한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배은희 의원이 나경원 의원석 모니터를 터치한 사실, 박상은 의원이 강봉균 의원석 모니터를 터치한 사실, 신성범 의원이 안영환 의원석 모니터를 터치한 사실은 이들이 각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니터들은 모두 타인에 의하여 터치되었고, 이 외에도 다른 의원석에 들어가 서성거리거나 모니터 밑을 터치하거나 이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단상점거조, 대리투표조 등 미리 역할분담이 되어있지 않고는 벌어지기 힘든 일입니다. 영상을 보면 단상을 점거한 후, “민주당 들어옵니다.”라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이가 단상점거조에 알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들어온 후 단상점거조와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자 그 와중에 대리투표가 시작된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피청구인들은 “영상에 나타난 손의 방향이 모니터 방향과 다르다.” “모니터에 터치된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치 않은 변소입니다. 이 소란 속에 무슨 이유로 한가하게 남의 자리에서 혹은 손을 뺀고, 혹은 모니터 밑을 만지고 남의 자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흡사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점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이 사건 국회입니다.

위 영상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정황상 대리투표가 상당 수 더 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됩니다. 이 건 영상이 촬영될 당시 극도의 혼돈상황이었고, 대리투표만을 염두에 두고 누가 어느 자리에서 투표하는가를 계속 주목하고 촬영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상

에 찍힌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들과 회의록이 피청구인의 지배 하에 있습니다. 그것들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흔적도 보입니다(갑제39호증의 1,2,3). 피청구인들은 송출시간이 표시된 동영상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청구인들이 추궁한 후에야 이를 제출한 것입니다(위 갑제39호증의1,2,3은 이 동영상을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무법천지가 된 입법절차를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국회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수준이 이러합니다. 이 사건은 국회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시킬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5. 이 사건 재판은 우리 사회의 성격(character), 나라의 품위(dignity)에 관한 재판입니다. 이 사건 법안들은 국회의장이 말했듯이 민생 법안도 아닙니다.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야가 타협으로 얼마든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들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느냐고 대의민주주의라는 큰 가치를 내팽개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는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세계의 언론이 당장 그 결정을 번역합니다. 이 사건 혼돈국회 동영상과 함께 방영합니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대리 투표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률안이 부결됐는데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재투표케 하여도 적법한 것이 된다고 방영합니다. 나라의 품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대리투표를 해도 되는 나라로 굳어집니다.

국회의장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표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언제까지라도 재투표케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회위원들 성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투표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따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장 선거하는 교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법치는 집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른바 “관심 있는 사건”을 몰아주기 배당을 하고서도 이를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를 펴고, 국회는 혹은 남의 투표를 멋대로 대신하고, 혹은 투표종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 부결되었음이 관명되자 바로 재투표케 하여 뒤집기를 하고서도 자율권, 의사정리권, 선례라는 이름으로 무엇이 문제냐고 되묻습니다. 의사 절차상의 정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민은 절망합니다.

피청구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들의 처신은, “자율이다.” “의사정리다.” “선례에 따른 것이다.” “혼돈 때문에 생긴 착오다.” 그러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최악의 선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끔찍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 국회법 중 적어도 의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사문화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왜 만들어야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런 선례를 굳혀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에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결단에 따라 이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의 성격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달리 짊어지고 있는 소임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사회가 발전합니다. 사법은 신선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헌법재판소밖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6.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삽니다.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따분하게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따분하고 귀찮게 보이기도 하는 일상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생각지도 않았던 누군가의 깨달음에서 우리의 역사는 발전해 온 것입니다. 뉴턴은 그 유명한 사과와 일화를 남겼고, 링컨은 노예들의 외침에서 깨달아 노예해방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남다른 깨달음을 한 것입니다. 그 많은 대통령 중 우리가 19세기의 링컨을 유독 기억하는 것은 그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예제는 예부터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굳은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인권, 그리고 미 연방유지라는 큰 가치를 위해 그 콘크리트를 깨부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링컨이 직면했던 도전은 엄청난 것이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편안함과 미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의 가치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었겠죠. 이러한 도전도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관님들에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월 항쟁 정신으로 만들어진 헌법의 명령인 것입니다. 도전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결단을 내릴 때 그것은 영광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른 결단을 내리셔서 우리 사회의 성격을, 나라의 품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법언 하나 말씀 드리고 맺을까 합니다.

“사법은 신선할수록 그 향기가 높다” (Fresh justice is the sweetest -프랜시스 베이컨).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 (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 - 영미법언).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 9. 29.

청구인들의 대리인

범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박 재 승

헌법재판소 귀중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1, 2007

Democracy's Root: Diversity

By THOMAS L. FRIEDMAN

Last Tuesday, King Abdullah of Saudi Arabia met Pope Benedict XVI at the Vatican — the first audience ever by the head of the Catholic Church with a Saudi monarch. The Saudi king gave the pope two gifts: a golden sword studded with jewels, and a gold and silver statue depicting a palm tree and a man riding a camel.

The BBC reported that the pope “admired the statue but merely touched the sword.” I think it is a great thing these two men met, and that King Abdullah came bearing gifts. But what would have really caught my attention — and the world’s — would have been if King Abdullah had presented the pope with something truly daring: a visa.

You see, the king of Saudi Arabia, also known as the Keeper of the Two Holy Mosques of Mecca and Medina, can visit the pope in the Vatican. But the pope can’t visit the king of Saudi Arabia in the Vatican of Islam — Mecca. Non-Muslims are not allowed there. Moreover, it is illegal to build a church, a synagogue or a Hindu or Buddhist temple in Saudi Arabia, or to practice any of these religions publicly.

As BBCnews.com noted, “some Christian worship services are held secretly, but the government has been known to crack down on them, or deport Filipino workers if they hold even private services. ... The Saudi authorities cite a tradition of the Prophet Muhammad that only Islam can be practiced in the Arabian Peninsula.”

I raise this point because the issue of diversity — how and under what conditions should “the other” be tolerated — is roiling the Muslim world today, from Lebanon to Iraq to Pakistan. More churches and mosques have been blown up in the past few years than any time I can remember.

A senior French official suggested to me that maybe we in the West, rather than trying to promote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 a notion tainted by its association with the very Western powers that once colonized the region — should be focusing on promoting diversity, which has historical roots in the area.

It's a valid point. The very essence of democracy is peaceful rotations of power, no matter whose party or tribe is in or out. But that ethic does not apply in most of the Arab-Muslim world today, where the political ethos remains “Rule or Die.” Either my group is in power or I'm dead, in prison, in exile or lying very low. But democracy is not about majority rule; it is about minority rights. If there is no culture of not simply tolerating minorities, but actually treating them with equal rights, real democracy can't take root.

But respect for diversity is something that has to emerge from within a culture. We can hold a free and fair election in Iraq, but we can't inject a culture of diversity. America and Europe had to go through the most awful civil wars to give birth to their cultures of diversity. The Arab-Muslim world will have to go through the same internal war of ideas.

I just returned from India, which just celebrated 60 years of democracy. Pakistan, right next door, is melting down. Yet, they are basically the same people — they look alike, they eat the same food, they dress alike. But there is one overriding difference: India has a culture of diversity. India is now celebrating 60 years of democracy precisely because it is also celebrating millennia of diversity, including centuries of Muslim rule.

Nayan Chanda, author of a delightful new book on globalization titled “Bound Together: How Traders, Preachers, Adventurers, and Warriors Shaped Globalization,” recounts the role of all these characters in connecting our world. He notes: “The Muslim Emperor Akbar, who ruled India in the 16th century at the pinnacle of the Mughal Empire, had Christians, Hindus, Jain and Zoroastrians in his court. Many of his senior officials were Hindus. On his deathbed, Jesuit priests tried to convert him, but he refused. Here was a man who knew who he was, yet he had respect for all religions. Nehru, a Hindu and India’s first prime minister, was a great admirer of Akbar.”

Akbar wasn’t just tolerant. He was embracing of other faiths and ideas, which is why his empire was probably the most powerful in Indian history. Pakistan, which has as much human talent as India, could use an Akbar. Ditto the Arab world.

I give King Abdullah credit, though. His path-breaking meeting with the pope surely gave many Saudi clerics heartburn. But as historic as it was, it left no trace. I wished the pope had publicly expressed a desire to visit Saudi Arabia, and that the king would now declare: “Someone has to chart a new path for our region. If I can meet the pope in the Vatican, I can host Christian, Jewish, Hindu, Shiite and Buddhist religious leaders for a dialogue in our sacred house. Why not? We are secure in our own faith. Let us all meet as equals.”

Why not?

